

# 최근 경제위기하 독일의 실업정책 동향: 실업기금 재정관리와 실업자 빈곤대책을 중심으로

박명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강사)

## ■ 머리말

지난 2008년 말,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은 독일 정부는 그간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여 실행하면서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대응책을 펼쳐 왔다. 특히 단축조업과 실업기금 등 종래 독일 사회보장 시스템의 여러 기제들의 작동은 이번 위기대응에 있어 주요한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적지 않은 기업들이 감원 대신 조업단축을 택했고, 해고가 발생하더라도 종래에 축적되어 온 실업기금은 실업자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있어 주요한 기능을 했다.<sup>1)</sup>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경제위기의 여파가 서서히 본격화되면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다. 실업기금의 경우, 조업단축기금의 증대는 물론이고 실업자의 증가로 인한 급여지출의 증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 고갈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다. 단기실업자의 단계를 지나 장기실업 상태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그들의 빈곤문제 역시 점차 가중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독일 정부는 새로운 실업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Botsch 2009; Döring, Greß et al., 2009).

본고는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구축된 독일의 실업정책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

1) 대표적으로 최근 경제위기에서의 경기부양책과 독일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된 단축조업 양상에 대해서는 박명준 (2009)을 참조.

서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가지 주제들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는 독일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들이 실업기금의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특히 늘어나는 실업자 수로 인해 생길 수밖에 없는 실업기금의 재정난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가의 주제이다. 두 번째는 실업자 수의 증대, 빈곤화 및 장기실업화의 난제를 어떠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해결하려 하는가이다. 이 둘은 다소 상호 모순적인 방향성을 지니지만, 실업 증대의 상황에서 모두 불가피한 조치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대체로 독일의 노동시장과 관련한 여러 연구기관들의 근래의 연구보고서들과 주요한 언론기사 및 보도자료 등을 참고로 하였다. 먼저 배경으로 독일의 실업보험제도와 경제위기하 실업동향에 관하여 살펴본 후에, 각각 위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하겠다. 끝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 ■ 배경: 제도와 상황

### 제도적 · 정치적 배경

2003년 소위 하르츠 개혁(Hartz Reform)으로 명명되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하여, 독일의 실업보험제도는 큰 변화를 겪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박지순, 2001; 박명준, 2003; 박지순, 2004; 박명준, 2006). 실업제도와 관련해서 종래의 실업보조금을 제1 실업기금(Arbeitslosengeld I, 이하 ALG I)으로 정비하였고, 실업부조금과 사회부조금을 합쳐서 제2 실업기금(Arbeitslosengeld II, 이하 ALG II)으로 명명하면서, 장기실업자들에게 지출되었던 보조금을 삭감함과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구직행위에 참여토록 촉구하는(fordern) 내용의 개혁이 대표적으로 이루어졌다.

ALG I의 경우, 공식적인 고용관계를 지속하다가 실업상태에 처하게 된 사람이 일자리를 다시 찾는 과정에서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을 지니며, 그 액수는 종전 순임금의 60% 수준에 이르고(자녀양육자의 경우 67%), 지급기간은 보통의 경우 최저 12개월에서 최장 24개월까지이다. ALG I의 경우, 예산 총원은 주로 고용주와 피고용자 대표-사회적 파트너-가 각각 세전임금의 일정한 비율(예컨대 3.25% 가량)의 분담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연방정부의 재원과 기타 재원 등을 통해 보충적인 재원이 마련된다.

ALG II의 경우, 15세에서 65세 사이의 성인들 가운데 경제활동 능력이 있으나 장기적인 실업상태에 처한 이들 중 생계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겨냥하여 대체로 연방정부가 세금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BA로 하여금 집행케 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ALG II의 수급자들은 의무적으로 상세한 내역의 재산신고를 해야 하고, 그의 동향을 검사받아야 한다. 대체로 무자녀 독신자의 경우 월 351유로를, 한 자녀를 양육하는 독신자의 경우 688유로를 기본급으로 지급받고, 여기에 거주비, 난방비 등 여타 부대 생활비용을 지원받는다.

한편, 경제위기와 정권교체의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래의 제도에 대한 수정론이 심하게 대두되고 있다. 즉, 지난 사민-기민 대연정 정부(2005~2009)를 거쳐 작년에 새로이 출범된 기민-자민 보수연정 정부하에서 최근 하르츠 개혁의 성과 및 추가 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ALG II를 의미하는 소위 ‘하르츠 IV(Hartz IV)’의 적실성에 관한 논의는 최근의 경제위기와 별도로 가장 민감하게 부각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독일 헌법재판소는 하르츠 IV에 대해서 일부 위헌 판결까지 내리면서 논쟁의 불에 기름을 더했다. 소위 ‘개혁의 개혁(Reform der Reform)’으로 불리우는 이러한 논의들에서, 대체로 종래의 개혁을 추진했던 당시의 집권 세력의 중추였던 사회민주당의 일부 정객들은 이를 방어하기 위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우파라고 할 수 있는 FDP가 종래 개혁의 총체적인 재점검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선명성 부각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

## 노동시장 상황

경제위기하의 독일 노동시장은 종래의 노동시장 제도의 작동으로 그 충격이 폭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체로 완만한 속도로 악화되어 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로 인하여 실업보험의 재정부담, 다시 말해서 BA의 재정적자는 점증하고 있고, 실업자들의 빈곤화 경향 역시 점차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이번 경제위기 이전까지 독일의 노동시장은 독일통일의 거대한 구조변화 이후 약 10여년간의 고실업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상황에서 뚜렷이 벗어나는 모습을 몇 년간 보여주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재작년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유수의 기업들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종래의 고용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전체적인 실업자 수가 급격하게 증대하지 않은

것이였다. 악성 고실업의 상징적인 숫자였던 400만 명의 고지가 이미 붕괴된 지 수 년이 지났지만, 이번 경제위기가 다시 그러한 고지의 탈환까지 이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Fokus Online, 2009/11/17). 그럼에도 지난 1~2년 새 실업자 수는 꾸준히 증대하고 있다. 독일 통계청의 집계에 따르면, 제조업에서의 고용인구의 규모는 2009년 연초 이후 약 17만 명이 감소하여 연말에 약 504만 명의 수준에 이르렀다. 실업자로 등록된 파견노동자들의 수도 같은 기간 34만여 명이 증대하였다. 전체적으로 2009년 한 해 동안 약 5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산업부문으로는 기계-자동차산업 및 연계부품 조달 부문에서 그 증가세는 가장 두드러졌다(Fokus Online, 위의 글). 연방노동 에이전시(BA)의 사무총장인 바이제(Weise) 씨는 지난 연말 노동시장 상황을 전망하며, 향후 1~2년간은 계속해서 점진적인 악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Focus Online, 2009/12/ 18; 2009/12/19).

장기실업자들의 동향을 보았을 때, 독일의 상황은 특히 다른 유럽의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IW, 2009, Nr. 19). 다만, 이번 위기로 인하여 특별히 하르츠 IV의 수급자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지는 않았다(Brenke 2010: 3). 그럼에도 경제위기의 여파가 이들의 실업탈출의 가능성을 더욱 더 낮출 것이기에, 그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위해서 단기적인 처방과 중장기적인 처방이 모두 모색되고 있다.

한편, BA의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전망에 따르면, 2010년 말까지 적자 규모가 약 210억 유로(21 Mrd. EUR)에 이를 것이며, 그 이후에도 쉽게 적자를 회복하지 못하고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다. 중장기적인 고용확대의 전망이 약한 상태에서 이러한 재정적자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화된 것으로 고착될 것으로 보인다(Döring, Greß et al., 2009: 13~14). 최근 독일 경제연구소(DIW)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일의 빈곤화 경향도 점차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빈곤 문제는 특히 장기실업자들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Grabka & Frick, 2010).

## ■ 실업기금 재정관리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독일 정부가 보이고 있는 실업정책상의 변화 양상들 가운데 실업기금의 재정관리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치들은 각각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의 관리로 구분될 수 있다.

## 수입 측면

실업기금 수입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에는 사회보험을 위한 ‘연방정부의 세입 증대(Erhöhung des Bundeszuschusses)’와 실업보험 가입자의 ‘분담금 비율의 증대(Anhebung des Beitragssatzes)’가 대표적이다.

첫째, 실업기금은 물론이고 여타 사회보험과 관련한 정부의 재원 마련을 위한 세입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5월의 추정에 의하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를 통틀어 독일 정부의 사회보험 관련 지출 필요 예산은 2009년에 약 450억 유로 가량에 이르고, 2010년에는 약 847억 유로에 이른다. 이는 1년새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지출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정부의 공적 재정에서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세입의 증대를 불러오고 있다(Botsch, 2009: 1).

둘째, 경제위기 이전, 지난 2001~2007년 사이에 실업기금 가입자들의 분담금 부담률은 점진적으로 낮아졌다. 특히 2005년 이후 호전된 경기상황으로 인하여 지난 4~5년 사이의 분담금의 비율은 두드러진 변화를 겪었다. 2006년의 경우 6.5%였던 것이 이듬해에는 4.2%로 대폭 감소되었고, 다시 2008년에는 3.3%로 추가적으로 감소되었다. 2009년에는 더욱 낮아져 2.8%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지속되기 어렵게 되었다. BA는 부담률 하락 추세에 제동을 걸어, 2010년 1월부터는 그것을 3%대로 올리기로 하였고, 향후 더 감소 전망은 없다고 하겠다(Döring, Greß et al., 2009: 13).

## 지출 측면

실업기금 지출 측면에서는 소위 지급 중단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BA는 근래에 들어 실업기금 수급자들이 구직행위를 촉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면담 일시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을 경우 실업기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중단 시간(Spernzeiten)을 기록적으로 증가시켰다. 그것은 지난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일로를 걸어 2009년에는 84만 3,000시간에까지 이르렀다(Spiegel Online, 2010년 2월 8일자 기사).

지급 중단은 면담 불응뿐 아니라 수용가능하다고 판단되는(zumutbar) 업무들을 거부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향한 구직노력이 결핍된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표 1〉 BA의 연도별 AL표 2G I 지급 중단 시간(Sperrzeiten) 수 추이

연도	2006	2007	2008	2009
제재 시간	527,000	639,000	741,000	843,000

출처: Spiegel Online (2010, 위의 기사)의 내용으로부터 필자가 구성.

대체로 이러한 처벌행위에 따른 지급 중단 기간은 약 1주에서 2주 정도에 이른다. 이러한 중단 시기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등록된 실업자 수는 약 6만여 명 정도가 줄어들었다. 현재 실업자들에게 지급되는 평균 실업급여는 매년 약 15,600유로에 이르며, 이를 감안하면, BA는 약 9억 유로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보았다(Spiegel Online, 상동).<sup>2)</sup>

## ■ 실업자들의 빈곤화에 대한 대응

실업자들의 빈곤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독일 정부가 취하고 있는 가시적인 조치들은 크게 종래의 제도적 범위 안에서의 새로운 정책적 노력을 벌이는 형태와 보다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한 해결 모색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기존 제도의 활용: 단기적 조치들

종래의 제도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단기적인 조치들로는 단축조업제도 적용기간의 연장, 구직행위의 적극적 유도, 그리고 ALG II 수급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국가 보조의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첫째, 독일 정부는 지난 2009년 11월, 단축조업의 적용기간(Bezugsfrist)을 연장하여 그에 해당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단축조업금(Kurzarbeitergeld)을 종래의 12개월을 넘어 최장

2) 그러나 BA의 이러한 조치는 시장의 구매력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Döring, Greß et al., 2009: 14).

18개월까지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BMAS 보도자료, 2010/11/25). 이는 실업의 증대를 막고 고용안정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간접적으로 근로자들의 빈곤화를 제어하려는 함의를 지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이번 위기를 맞이하여 장기실업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구직행위에 나서고 있으며, 정부도 이들의 취업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enke, 2010).

셋째, ALG II 수급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국가보조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소위 규정조치(Regelleistung)로 불리는 기초적인 소득지원 이외에도, 수급자들의 거주비와 연금 등 사회보험 분담금까지 정부가 내주며, 나아가 수급자들의 공공 교통요금 지원과 미술관 입장료 지급 등까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정부별·도시별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의 증대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비판론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IW, 2009, Nr. 16).

## 새로운 제도 모색: 중장기적 조치들

종래의 하르츠 IV를 대신하여 소위 시민소득(Bürgergeld), 기초소득제(Grundeinkommen) 등 매우 획기적인 방식의 제도 도입이 모색되고 있다. 주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적극적인 논의를 이끌고 있고, 그것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화의 수준과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시민소득은 현재의 집권연정의 한 축을 형성하는 자민당(FDP)의 지난 총선때 공약이기도 한데, 그 내용은 일체의 사회보장상의 요구를 하나로 묶어 일정한 액수의 돈을 매월 시민들에게 지급토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독신으로 살면서 육아부담이 없는 사람의 경우 그러한 명목으로 매월 평균 662유로를 받게 하고, 여기에 기초사회보험과 거주 및 난방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ALG II의 수준에 대체로 부합하며, 하르츠 IV가 갖는 강제성의 부작용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FAZ.NET. 2010/02/16; 2010/02/17).

둘째, 기초소득제는 생필품 화학공산품 체인점의 하나인 DM의 대표이사인 괴츠 베르너(Götz Wemer) 씨가 추구하는 매우 급진적인 정책으로서 어떤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기보다 일단 그 철학과 원리가 강조되고 있다. 핵심은 노동자들이 얼마나 일을 하여 얼마의 소득을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자유롭게 결정토록 하는 것에 있고, 이를 통해 종래의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하는 기획까지

담고 있다. 일체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고,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매우 높은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져올 근로의욕 상실 등의 부작용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아직은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며, 구체적인 정책으로의 가시화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FDP의 경우 시민소득을 강조하며 기초소득제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FAZ.NET, 2010/02/17).

## ■ 맺음말

지금까지 경제위기 이후 독일 노동시장의 상황과 그것을 추스리기 위한 정책을 실업의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재 독일은 지난 2003년에 획기적으로 추진한 노동시장 제도개혁을 통하여 경제위기 이전까지 노동시장 상황의 호전을 경험하였다가, 최근의 경제위기로 재차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2년여 동안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실업자 수, 실업기금의 재정, 실업자들의 빈곤화 등 여러 측면에서 노동시장 부담 요인들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다.

실업보험 재정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수입 측면에서 사회보험 전반을 위한 정부의 세수를 늘리고, 실업보험 가입자들의 분담금을 높이는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지출 측면에서는 지급중단 조치를 강화하는 방식의 정책적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업자들의 빈곤화에 대한 대응 조치로는 단기적으로 종래의 제도적 범위 안에서, 단축조업제도 적용기간의 연장을 통한 실업화의 방지, 장기실업자들의 구직행위의 적극적인 지원과 유도, ALG II 수급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국가 보조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시민소득, 기초소득제 등 종래의 하르트스 IV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모색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경제위기의 여파가 고용에 급격한 타격을 주지 않은 채 상황을 끌고 왔지만, 향후 고용회복 전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시장제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정책 도입과 제도개혁의 방향과 정도도 계속해서 재정의될 것으로 보인다. **KL**



< 보고서 및 연구논문 >

- Botsch, A. (2009), Auswirkungen der finanz- und realmark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auf die sozialen Sicherungssysteme. WISO direkt. Bonn, FES.
- Brenke, K. (2010), Fünf Jahre Hartz IV – Das Problem ist nicht die Arbeitsmoral. Wochenbericht des DIW Berlin. Berlin, DIW.
- Döring, D., S. Greß, et al. (2009), Kurzfristige Auswirkungen der Finanzmarktkrise auf die sozialen Sicherungssysteme und mittelfristiger Handlungsbedarf. WiSo Diskurs. Bonn, FES.
- Grabka, M. M. and J. R. Frick (2010), Weiterhin hohes Armutsrisiko in Deutschland: Kinder und junge Erwachsene sind besonders betroffen. Wochenbericht Berlin, DIW.
- 박명준 (2003), “2003년 독일 노동시장 개혁”, 『국제노동브리프』 1(1), pp. 50~55.
- \_\_\_\_\_ (2006), “독일의 고용촉진 관련 주요 정책들의 추진 경과와 전망”, 『국제노동브리프』 4(10), pp.81~89.
- \_\_\_\_\_ (2009), “최근의 경제위기와 독일 자동차산업의 대응전략”, 『국제노동브리프』 7(2), pp. 20~32.
- 박지순 (2001), “독일의 최근 노동입법 동향”, 『노동법학』 12, pp.233~262.
- \_\_\_\_\_ (2004), “독일의 노동시장 및 노동법 개혁: 노동법과 사회법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한국노동법학』 18, pp. 291~330.

< 신문기사 및 보도자료 >

- BMAS 보도자료(2010/11/25), “Kurzarbeit wird verlängert”.  
[http://www.bmas.de/portal/40436/2009\\_11\\_25\\_kug.html](http://www.bmas.de/portal/40436/2009_11_25_kug.html)
- FAZ.NET(2010/02/16), “Bürgergeld gefordert: Die FDP will Hartz IV generalüberholen”.  
<http://www.faz.net/s/Rub0B44038177824280BB9F799BC91030B0/Doc~E0CB25120EAF143A6A7364CECA3581AF3~ATpl~Ecommon~Scontent.html>
- \_\_\_\_\_ (2010/02/17), “Nach dem Hartz-IV-Urteil Gesucht: Eine neue Balance im Sozialstaat”.

---

<http://www.faz.net/s/Rub0B44038177824280BB9F799BC91030B0/Doc~E8A86328F56D54549BFA131358D4F0BF9~ATpl~Ecommon~Scontent.html>

- Fokus Online(2009/11/17), “Krise vernichtet Hunderttausende Stellen”.  
[http://www.focus.de/finanzen/news/arbeitslosigkeit-krise-vernichtet-hunderttausende-stellen\\_aid\\_454812.html](http://www.focus.de/finanzen/news/arbeitslosigkeit-krise-vernichtet-hunderttausende-stellen_aid_454812.html)
- Focus Online(2009/12/18), “Der Arbeitsmarkt wird noch lange leiden”.  
[http://www.focus.de/finanzen/news/arbeitsmarkt/bundesagentur-chef-weise-der-arbeitsmarkt-wird-noch-lange-leiden\\_aid\\_464287.html](http://www.focus.de/finanzen/news/arbeitsmarkt/bundesagentur-chef-weise-der-arbeitsmarkt-wird-noch-lange-leiden_aid_464287.html)
- \_\_\_\_\_ (2009/12/19), “Nichts wird wieder wie vorher”.  
[http://www.focus.de/finanzen/news/arbeitsmarkt/tid-16717/deutschland-nichts-wird-wieder-wie-vorher\\_aid\\_464060.html](http://www.focus.de/finanzen/news/arbeitsmarkt/tid-16717/deutschland-nichts-wird-wieder-wie-vorher_aid_464060.html)
- IW. (2009), “Arbeitslosengeld II: Viele Zusatzleistungen”, iwd. Nr. 16: Köln.
- \_\_\_\_\_. “Langzeitarbeitslose: Deutschland hat zu viele”, iwd. Nr. 19: Köln.
- Spiegel Online(2010/2/8), “Strafbescheide gegen Arbeitslosengeld-Empfänger steigen auf Rekordwert”.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0,1518,676451,00.html>